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수영구보

호외 제731호 2023. 10. 30.(월)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43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67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73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77

규

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82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93

회 람								
--------	--	--	--	--	--	--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2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구청장은 구 금고 정기예금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 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계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행정안전부 권고^[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3214(2020. 6. 9.)호]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제1조)
- 나.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제2조)
- 다.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채원과 용도 (제3조~제4조)
- 라.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및 이자 (제5조~제6조)
- 마. 통합기금의 운용 심의 (제7조)
- 바. 회계공무원 (제8조)
- 사. 관계규정 준용 (제9조)
- 아. 통합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2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영 제17조에 따라 소송
수행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생략)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 ----- -----.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 -----
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 ----- -----
<신설>	5. <u>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u>
<신설>	<u>제8조의2(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영 제17조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2022. 12. 27. 공포 및 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 신설 (제5조제2항)

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제8조의2)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2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세무2과의 위임사무명란 중 제1호의 근거 및 적용법령란 중 “같은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위임사무명란 중 제2호의 근거 및 적용법령란 중 “「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로 하며, 위임사무명란 중 제5호와 제5호의 근거 및 적용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3조 관련)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3조 관련)			
주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령	수임처	주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령	수임처
세무2과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동장	-----	-----	같은 법 -----	---
	2.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	-----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3.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	-----	
	4.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	-----	
신설				5. 마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민원 여권과	(생 략)	(생 략)	동장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기초생활 보장과	(생 략)	(생 략)	동장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가족 행복과	(생 략)	(생 략)	동장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도시 관리과	(생 략)	(생 략)	동장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토지 정보과	(생 략)	(생 략)	동장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제안이유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있어 세무2과 위임사무의 근거 및 적용법령을 정비하고

나. 세무2과 위임사무에 「지방세징수법」 개정(2023. 3. 14. 공포, 2023. 4. 1. 시행)에 따른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설하여,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가.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세무2과’ 위임사무의 근거 및 적용법령 정비, 신규 위임사무 신설 (별표 3)

- 1)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사무의 근거 및 적용법령 정비 등
- 2)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위임사무 신설과 이에 따른 근거 및 적용법령 정비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2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 한은 <u>2023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u> ----- ----.

◆ 제안이유

평생학습관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자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평생학습관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 (제13조)
-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광안3동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란 중 “망미변영로38번길 103(광안동)”을 “연수로404번길 27(광안동)”으로 하고, 광안4동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란 중 “호암로9번길 34(광안동)”을 “수영로 541(광안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별표]		[별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제2조 관련)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제2조 관련)	
구분	위치	구분	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생략)	-----	(현행과 같음)
남천1동 행정복지센터	(생략)	-----	(현행과 같음)
남천2동 행정복지센터	(생략)	-----	(현행과 같음)
수영동 행정복지센터	(생략)	-----	(현행과 같음)
망미1동 행정복지센터	(생략)	-----	(현행과 같음)
망미2동 행정복지센터	(생략)	-----	(현행과 같음)
광안1동 행정복지센터	(생략)	-----	(현행과 같음)
광안2동 행정복지센터	(생략)	-----	(현행과 같음)
광안3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u>망미변영로</u> <u>38번길 103(광안동)</u>	광안3동 행정복지센터	----- <u>연수로404</u> <u>번길 27(광안동)</u>
광안4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u>호암로9번길</u> <u>34(광안동)</u>	광안4동 행정복지센터	----- <u>수영로 541</u> <u>(광안동)</u>
민락동 행정복지센터	(생략)	-----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광안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및 광안4동 행정복지센터 위치 변경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광안3동 행정복지센터 및 광안4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 (별표)

1) 광안3동 행정복지센터

- 망미번영로38번길 103(광안동) ⇒ 연수로404번길 27(광안동)

2) 광안4동 행정복지센터

- 호암로9번길 34(광안동) ⇒ 수영로 541(광안동)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3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대하여는”를 “대해서는”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할”을 “해당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불가능 한”을 “불가능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수탁 받은”을 각각 “수탁받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6조(예약 및 이용료 납부) ①·② (생략)	제6조(예약 및 이용료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연수 및 수련행사 등에 <u>대하여</u> 는 시설이용에 있어 우선순위에 둔다.	③ ----- <u>대해</u> <u>서는</u> ----- ---
제8조(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의 감면)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 <u>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3. 「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6. 2000. 1. 1.일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u>3명 이상</u> 이 되는 가정	6. <u>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u>
7. (생략)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이용료의 반환) ① (생략)	제9조(이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u> 할 경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	② ----- <u>해당할</u> -----

한다.

1. (생략)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수련원 이용이 불가능한 때

제10조(수입금 관리 등) ① 이용료 등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② 위탁운영 시 이용료 등 수입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의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의 책무 등) ① (생략)

② 이용자가 시설물을 이용하는 동안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설물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 선정 및 계약) ① (생략)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생략)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수탁 받은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담보제공, 재위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을

--.

1. (현행과 같음)

2. -----

불가능한 ---

제10조(수입금 관리 등) ① -----

-----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② -----
----- 따라 -----
-----.

제11조(이용자의 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분실-----

-----.

제14조(수탁자 선정 및 계약)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수탁받은 -----

-----.

③ ----- 수탁받은 -----

<p>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생략)</p>	<p>-----</p> <p>-----</p> <p>-----.</p> <p>④ (현행과 같음)</p>
--	---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의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3→2자녀) 추진^[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9286(2023.6.16.)] 및 인용 자치법규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련원 이용료 감면 대상 중 다자녀가정 규정 정비 (제8조제1항제6호)

- 출산 자녀 3명 이상 양육가정 ⇒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 양육가정 중 막내가 19세 미만인 경우

나. 인용 조례 제명 정비 (제10조제1항)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 ⇒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3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전자 민원창구”를 “전자민원창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알권리”를 “알 권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를 “구청장은”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인터넷민원”을 “인터넷 민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처리결과”를 “처리 결과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적용할수”를 “적용할 수”로, “민원 신청시”를 “민원신청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변경에 응하여야”를 “변경하여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발생시”를 “사고발생 시”로 한다.

제16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생략)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전자민원창구</u> 운영	3. <u>전자민원창구</u>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u>알권리</u>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7. ----- <u>알 권리</u>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u>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u>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로 접수한 민원은 「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 및 「 <u>전자정부법</u>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u>구청장은</u> ----- ----- ----- ----- ----- 「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민원처리) ① (생략)	제7조(민원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자민원창구의 <u>인터넷민원</u> 은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의 처리비용이 결제된 이후에 처리된다.	② ----- <u>인터넷 민원</u> ----- ----- -----.
제8조(민원처리 공개) ① (생략)	제8조(민원처리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민원 담당부서에서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 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전체자료는 매주 1회, 변동자료는 매일 1회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② ----- 대해서는 -----

처리결과까지-----
-----, -----
----- 공개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

적용할 수 -----
민원신청 시 -----
-----.

④ -----

----- 변경하여야
-----.

제15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

----- 마련
-----.

② -----

<p><u>사고발생시</u>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제16조 (비밀번호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부산광역시 정보보안업무 지침에 <u>의하여</u>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7조 (개인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u>강구</u>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u>사고발생시</u> ----- -----.</p> <p>제16조 (비밀번호관리) ----- ----- ----- ----- <u>따라</u> ----- -----.</p> <p>제17조 (개인정보보호) ① ----- ----- ----- <u>마련</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 제안이유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법」의 전자민원창구에 관한 조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제6조)

- 전자민원창구 관련 인용된 「전자정부법」 제명 삭제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제3조, 제7조,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3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제3조 중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을 “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서식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로, “장소등”을 “장소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 <u>시행규칙</u> <u>제28조에 따른</u> ----- ----- ----- ----- -----.
제2조 (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 6. (생략)	제2조 (기금의 재원)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u> 5. <u>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u> 6. (현행과 같음)
제3조 (세입 및 세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 (세입 및 세출) ----- ----- ----- ----- <u>법에 따른</u> ----- ----- -----.
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 ----- <u>제16조에 따른</u>

의한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 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 담당관은 기초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 (수입)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7조 (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 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 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 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 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

② -----
-- 제1항에 따른 -----

-----.

제6조 (수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
----- 장소 등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 (지출) ① -----

- 제6조제2항에 따른 -----

-----.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 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p> <p>제11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u>존속기한은</u> <u>2023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 ----- ----- -----.</p> <p>제11조(존속기한) ----- <u>존속기한은</u> <u>2028년 12월 31일까지</u>-----.</p>
--	---

◆ 제안이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 (제11조)

-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3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구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는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구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 등의 책무) ① 공공기관, 교육기관, 법인·단체 등은 소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기후위기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구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구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8조에 따른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구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1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⑨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의 사무국을 두거나 탄소중립 담당부서에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5. 적응대책의 수립·변경·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 수립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시책 등

제18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0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구청장은 업무용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등)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4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5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정보 교환, 기술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1조(포상)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구민, 사업자, 민간단체, 공무원 등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획, 지원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 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2021. 9. 24. 공포 및 2022. 3. 25.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촉구 및 녹색성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 (제1조)

나. 기본원칙 (제2조)

다. 구·공공기관 등·구민의 책무 (제3조~제5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

마.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제7조~제10조)

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제17조)

사.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시책 등 (제18조~제24조)

아.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5조~제29조)

자. 기후대응기금 및 포상 (제30조~제3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3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9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국적인 지하수측정시설(국가측정망)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 지하수측정시설(보조측정망)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생략)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제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u>2028년 12월 31일</u> -----.
제17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u>영 제29조 제1항</u> 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 ----- ----- ----- <u>법 제20조 제1항</u> ----- ----- ----- -----.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 측정망으로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1. <u>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국적인 지하수측정시설(국가측정망)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u>
2. <u>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지역지하수 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u>	2. <u>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 지하수 측정시설(보조측정망)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 (제7조)

-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제17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제21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예에 의하여”를 “예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13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u>따른</u> ----- ----- ----- ----- --.
제2조 (세입)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21조의2제3항의</u> 규정에 따른 재원 2. (생략)	제2조 (세입) ----- ----- ----- 1. ----- <u>제21조의2제3항</u> ----- ----- 2. (현행과 같음)
제4조 (보조대상) 법 제21조의2제7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이 회계에서 노외 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3. (생략)	제4조 (보조대상) 법 제21조의2제7항에 <u>따라</u> ----- ----- ----- ----- --.
제7조 (보조금의 반환) ① (생략) ② <u>제1항의</u>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제7조 (보조금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라</u> ----- -----

<p>때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u>예에</u> <u>의하여</u> 이를 징수한다.</p> <p>제11조(준용) 이 <u>조례에</u>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p> <p>제13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 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p>	<p>-----<u>예에</u> <u>따라</u> -----.</p> <p>제11조(준용) -- <u>조례에서</u> ----- -----.</p> <p>제13조(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u>----- --.</p>
--	--

◆ 제안이유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 (제13조)

-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1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3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영구 주민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 일상생활 지원, 보건의료 및 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제공기관”이란 통합돌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주거, 일상생활 지원, 보건의료 및 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기관·단체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합돌봄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통합돌봄 대상자는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질환, 사고 등의 사유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실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돌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제6조에 따른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사업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통합돌봄 사업) 구청장은 통합돌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의 지원이 필요한 취약가구에 대한 돌봄사업
2. 그 밖에 통합돌봄 대상자의 자립생활 영위를 지원하기 위해 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합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을 통합돌봄 제공기관으로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인력, 시설 장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돌봄 제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통합돌봄협의체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민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통합돌봄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제공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기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통합돌봄 사례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사례회의(이하 “사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례회의의 구성은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와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의 실무분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사례회의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종합적 욕구 사정, 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결정·실시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구청장은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증진 및 참여 확산을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물품, 교육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구민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의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제3조)

다. 지원대상, 실행계획 수립, 및 통합돌봄 사업 (제4조~제6조)

라.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제7조)

마. 통합돌봄 협의체 및 사례회의 (제8조~제9조)

바. 교육 및 홍보 (제10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3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장애인 시설 내 장애인 대상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주거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 장애인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제3조)

다. 피해장애인 보호 및 신고체계에 마련에 관한 사항 (제4조~제5조)

라. 시설의 점검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제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3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 사업
3.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
4.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 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추진 사업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장애가 정보에 접근하는 데 또 다른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제4조)
- 다. 추진사업 및 실태조사 (제5조~제6조)
- 라.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
- 마. 홍보 및 표창 (제8조~제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7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로, “구의 업무에 대한 구민”을 “구정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요업무”라 함은 구분청”을 ““주요업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으로, “업무중 당해연도”를 “업무 중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평가”라 함은”을 ““평가”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정기평가”라 함은”을 ““정기평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수립·시달”을 “수립·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8조 중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당해년도 3월말”을 “해당 연도 3월 말”로, “시달”을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요하거니”를 “요하거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확산하는데”를 “확산하는 데”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을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기획담당이”를 “기획업무 담당주사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 ----- 구정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민-----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주요업무”라 함은 <u>구본청,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당해연도 구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u>	1. “주요업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 업무 중 해당 연도 ----- -----.
2. “평가”라 함은 <u>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u>	2. “평가”란 ----- ----- -----.
3. “정기평가”라 함은 <u>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u>	3. “정기평가”란 ----- ----- -----.
4. “수시평가”라 함은 <u>주요업무 중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u>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5조(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 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u>의한</u> 각과, 보건소(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평가의 대상기관) ① ----- ----- ----- <u>따른</u> ----- ----- -----.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외에도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u>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u>당해</u>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u>범위안</u> 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② ----- ----- ----- <u>제4조제2항에 따라</u> ----- ----- <u>해당</u> ----- ----- <u>범위</u> ----- -----.
제7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월 30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u>당해연도</u> 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u>수립·시달</u> 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 ----- <u>해당 연도</u> ----- ----- ----- <u>수립·통보</u> ----- -----.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2월 20일까지 <u>당해연도</u> 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u>해당 연도</u> ----- ----- -----.
제8조(시행계획의 수정)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사업의 목표, 평가지표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시행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이를 수정한 날로	제8조(시행계획의 수정) ----- ----- ----- -----

<p>부터 <u>10일이내</u>에 그 사유 및 근거 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u>10일 이내</u>----- ----- -----.</p>
<p>제9조(정기평가계획의 작성) ① 구 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정기평가계획을 작성 하여 <u>당해년도 3월말까지</u> 평가 대상기관의 장에게 <u>시달</u>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정기평가계획에는 다음 <u>각호</u>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 6. (생 략)</p>	<p>제9조(정기평가계획의 작성) ① --- ----- ----- ---- <u>해당 연도 3월 말</u>----- ----- <u>통보</u>-----.</p> <p>② ----- - <u>각 호</u>-----.</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10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u>제9조의</u> <u>규정에 의한</u> 정기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u>제2항의</u> <u>규정에 의하여</u>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 반기 종료 후 <u>5일이내</u>에 기획전략과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생 략)</p>	<p>제10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 ----- ----- <u>제9조에 따른</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제2항에 따라</u> ----- ----- ----- <u>5일 이내</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자료의 요청 등) ① (생 략)</p> <p>② <u>제1항의</u> <u>규정에 의하여</u>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p>	<p>제11조(자료의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라</u> ----- -----</p>

<p>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 ----- -----.</p>
<p>제12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제1항에 따라 ----- ----- ----- 범위----- -----.</p>
<p>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 ----- ----- -----.</p>
<p>제1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p> <p>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 ④ (생략)</p>	<p>제1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p> <p>① ----- 제13조에 따른 ----- ----- -----.</p> <p>② ----- 제1항에 따라 ----- ----- ----- -----.</p> <p>요하거나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5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p>	<p>제15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p>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 사례를 <u>확산하는데</u> 노력한다.	① ----- ----- ---- <u>확산하는 데</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7조(기능) ----- -----.
1. <u>당해연도</u> 정기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u>해당 연도</u>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u>의한</u>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원장 <u>1인</u> 을 포함한 <u>7인 이상 15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성) ① ----- ----- ----- <u>따른</u> ----- ----- <u>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u>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u>다만, 위원이 껄워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u>	② ----- ----- . <u>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제20조(회의운영) ① (생략)	제20조(회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u>7일전까지</u>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u>7일 전</u>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21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u>위원중에서</u>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 <u>위원 중</u> ----- -----.
제2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u>기획담당인</u> 된다.	제22조(간사) ① ----- ----- <u>기획업무 담당주사가</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u>제17조의</u> <u>규정에 의한</u>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자료요구 등) ① ----- <u>제17조에</u> <u>따른</u> ----- ----- -----.
② <u>제1항의</u> <u>규정에 의하여</u>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u>제1항에 따라</u> ----- ----- ----- ----- --.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안이유

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 근거 조례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정비됨^(2022. 8. 1.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인용 제명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 정비 (제1조)

나. 인용 제명 정비 (제24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7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적극행정 지원신청 접수, 지원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집행, 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내에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선임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다.

제6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2. 제4조제1항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제4조제2항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비용서류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지원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① 적극행정 책임관이 제7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관계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①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 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5조(보수의 반환)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받은 지원 보수를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선임 지원
징계의결요구개요		징계의결 요구
		<div>요구일</div> <div>관할 징계위원회</div>
징계의결요구사유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p>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 ○ ○ (인)</p> <p>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p>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건번호	고소·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건개요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p>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 (인)</p> <p>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p>				

【별지 제4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illegible]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2022. 12. 27. 공포 및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영구 소속 공무원(퇴직 공무원 포함)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제2조)
- 나. 적극행정 책임관 (제3조)
- 다.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및 선임 (제4조~제5조)
- 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제6조)
- 마. 지원신청, 지원절차 안내 등 (제7조~제8조)
- 바. 사실관계 확인, 위원회 상정·심의, 심의결과 통보·집행 (제9조~제11조)
- 사. 자료 제출, 보고 (제12조~제13조)
- 아. 지원 취소, 보수 반환 (제14조~제15조)